

News

'집값 만큼만 유한책임 주담대' 16조원 돌파...은행권 확산 추진

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집값이 떨어져도 차주가 집 가치 만큼만 책임지는 정책금융상품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시중은행으로 확산키로 결정. 작년 16.1조 돌파하며 매년 급증 주담대는 채무연체 발생하면 금융사가 담보물인 주택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무한책임형' 주담대와는 달리 유한책임 주담대는 은행이 리스크를 지는 형태

하나銀, 환매중단 英펀드에 투자원금 50% 선지급 결정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는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결정. 가지급금 지급하기로 결정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원) 등 세가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 더 빨리 오른다

한겨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가 6개월째 벌어지는 중. 시중의 넘치는 자금이 은행에도 쏠리면서 예금이자 인상 요인이 낮지만 은행채 금리 등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 지난 3월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77%로, 6개월 전 2.66%보다 0.11%포인트 상승. 저축성수신금리는 0.86%로, 지난해 10월 0.88% 보다 0.02%포인트 하락

'은행빛도 탕감'...끝이 없는 선심성 금융정책

뉴시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 이는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차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채권 규모는 350억원(9000명)으로 추산

코스닥 1500개사 시대 개막... 글로벌 신시장 3위 규모

파이낸셜뉴스

기술특례 상장 등 상장 경로가 다양화되고 4차 산업혁명과 제2의 벤처붐 확산 등에 힘입어 코스닥 상장기업 '1500개사 시대'가 열렸다. 코스닥의 글로벌 위상도 높아졌다. 현재 상장기업 수를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은 세계 신시장에서 3위를 차지

'네이버 효과 없었다'...현대해상·DB손보, 소상공인보험 판매 '미미'

이코노미스트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네이버파이낸셜과 제휴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소상공인 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판매 건수는 매우 미미. 양사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소상공인 보험 연계 판매량은 유의미한 통계치가 책정되지 않는 수준. "계약 체결수가 미미하다"며 구체적인 판매량 공개는 어렵다고 밝혀

보험사·정비업계 또 만났다... 자동차보험료 결국 오르나?

머니S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가 하반기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정비업계의 정비수가 8.2% 인상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 18일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는 최근 3차 회의를 갖고 정비수가에 대해 논의. 구체적인 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정비수가 인상에 대해선 공감

NH증권, 옵티머스펀드 자체안 마련 가닥...다음주중 제시

이데일리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 대신 자체 피해자 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NH증권은 금감원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권고안에 준하는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 다음주 중 이를 제시할 방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